

[특집] 충남리포트 제54호 2011. 06. 30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목 차

1. 민선5기 충남도정 1년의 성과와 과제 정연정
2. 충남도 사회적경제 정책과 내발적 발전 송두범
3. 충남농정의 새로운 변화와 과제 유학열 · 조은정
4.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을 만들자 오용준
5. 민선5기 1년의 충남 사회복지 성태규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의 성과와 과제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1. 민선 5기 도정 목표 및 주요 과제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민선 5기 충남도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세우고, 도정 운영의 기본 방침을 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견제와 균형, 참여와 참의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인간중심적 자치 모델을 구성하는데 있어 충남도의 자주적 모델을 구성하려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발전 지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충남도는 개발과 성장중심의 발전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력을 투입하는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충남도가 집중해왔던 개발중심의 성장 모델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그리고 실질적인 내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선5기 이전까지의 개발과 물리적 성장중심의 발전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즉 지난 10여 년간 전국에서 충남은 가장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는가 하면, 2008년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도 충남 경제는 7-9%대의 고성장을 실현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성장이 실제 지역의 성장, 즉 내생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형성에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즉 충남 전체 생산의 37.2%정도가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자원에 의한 성장이었다면, 이와 반대로 43.7%정도는 오히려 타 지역으로 유출되

는 외부 의존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나 자본 유치를 통한 성장기반의 마련이 실제로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추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 내에서 창출된 많은 양의 부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지역의 부와 내생적 성장의 자원으로 축적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민선 5기 충남도정의 중요한 발전의 모멘텀(momentum)은 개발 중심의 물리적 성장의 결과물을 어떻게 지역의 내부적 자원으로, 또는 지역주민에게로 환원하는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갈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물리적 성장이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에 연결되어지는 행복한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치의 모델을 정립해가는 것이야말로 민선 5기 충남도정의 새로운 과제이며, 또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인간중심의 투자를 확대하는 과제,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는 물론 전통적인 산업기반으로서의 농정혁신 과제 등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선 5기 충남도는 지역주민의 복지기반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7개 분야 총 32개의 역점 추진 과제를 도출하기에 이른다. 관련 과제들을 살펴보면, 초중학교 무상급식, 무상보육 실시, 충남 복지재단의 설립, 도민참여예산제의 도입, 도민참여 감사제도의 도입, 귀농귀촌 지원센터 건립, 농수산혁신위원회 구성 등 그동안의 지역성장을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개혁 의제들이 도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민선5기 충남도정은 도민중심의 성장과 도정운영, 그리고 내생적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출발하였으며, 소통과 창의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의 핵심적인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 민선 5기 주요 정책환경

○ 외적 정책 환경의 변화와 위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민선5기 충남도는 내·외부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정책환경에 직면해 있다. 즉 내생적 지방발전을 제한하는 내·외부적 환경을 어떻게 기회요인으로 변화시키는가가 충남도정의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부적으로는 점차 심화되는 지방재정의 위기국면을 어떻게 충남도가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재정분권의 열망이 오랫동안 표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더 압박하는 환경을 형성했다. 이른바 취득등록세의 인하를 기본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정부의 주요한 재원을 감소시킴으로써 충남도의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외부 기업이나 자본유치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충남도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역으로 더 많은 제약을 받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민선5기 충남도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위기적 환경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성을 갖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 지방발전, 국가균형 발전시각은 점차 퇴보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에 인접해있는 충남도 서북부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렴한 토지 가격을 전제로 다양한 기업 유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충남도의 핵심 산업단지 조성 지역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투자손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충남의 국내 기업 유치 실적은 2008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 이르러 1년 사이 기업유치 실적이 17%정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퇴보, 즉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집약되는 정책조정으로 인해 충남도는 민선4기 말 도지사의 지사직 사퇴는 지역 내 균열이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종시 수정논란을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 과정에서 지불해야 했던 사회적 비용, 그리고 지역내부의 수정안과 원안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 등을 해결하는 것이 민선5기 충남도정의 중요한 과제였다.

○ 내적 환경

지방재정의 악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방위기, 그리고 균형발전의 퇴보로 인한 지역내부의 갈등 처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민선 5기 충남도가 직면한 주요한 내적 환경과 관련된 문제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현상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부족과 경제 활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충남도의 경우 인구의 다수가 고령화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특히 젊은 인력들의 외부 유출로 인해 자생적인 경제 성장의 인적 기반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다. 결국 민선5기 충남도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충남도의 내생적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내의 인력보호는 물론 필요한 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경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인구의 역외 유출 현상을 최소화하며, 젊은 인구의 역내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민선 5기 충남도가 직면한 또 하나의 환경은 지역내의 격차문제이다. 지역내의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 문제, 즉 지역, 산업, 고용, 소득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도내 북부권 중심으로 산업 활동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었는데, 북부권 지역이 충남도내의 전체 GRDP에 약 68.1%를 차지하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총 31.9%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총생산량의 차이는 지역주민들간의 소득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산업구조면에 있어서도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업의 6% 수준에 불과함으로써 농민과 도시민들간의 고용과 직업적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민선 5기 충남도는 내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자원의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투자여력의 부족 현상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 간, 산업 간 불균형의 심화로 인한 격차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3. 민선 5기 1년의 주요 성과

민선 5기 1년을 지낸 현 시점에서 기존의 성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 등을 전제로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 평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선 5기 충남도정은 기존의 사람중심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분권의 중심부로서 충남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다.

민선 5기 충남도정의 가장 큰 성과는 8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급식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무상급식센터 등을 시·군 단위로 설치하여 급식의 질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한 바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데 교육청과 행정조직간의 마찰과 갈등으로 사업범위를 축소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문제점을 노정시켰던데 반해, 충남도는 충남도 교육청과 다양한 협의절차를 통해 2011년 4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충남도의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생활의 질을 높임으로써 자녀 양육의 최적

지로 충남도가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무상급식과 더불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역시 민선 5기 1년의 중요한 성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충남도는 7월 1일부터 충남도내 공사립 유치원 원아 중 셋째 아이 이상 유아에게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된다. 물론 이는 충남도지사의 공약사항중의 하나인 만 5세 무상보육이 정부에서 내년 3월부터 실시되게 됨으로써 국가재정의 지원이 도달하지 못하는 보육을 핵심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로 하면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이러한 충남도의 무상보육 실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도내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민선 5기 충남도정의 사람중심의 투자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농정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 발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도내에 존재하는 소득, 직업, 경제발전의 격차 등을 본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단순한 재정투입의 차원을 지양하고, 새로운 마을 만들기 및 농업혁신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함으로써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의 차원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기획력과 지원력을 결합한 복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도내 지역의 순수한 이윤창출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선 5기의 주요한 투자 유치 전략은 매우 새로운 시도를 해오고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도내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도내 총생산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최근에는 47개의 중소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협약을 도출해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앞으로 도내 실질적인 성장과 어떠한 연계고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투자 유치의 새로운 방향을 자치단체 스스로가 발굴·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중심의 변화를 추구하는 민선 5기 충남도정은 도내 지역주민의 삶과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 기존 충남도는 경제중심의 행정조직 편제를 강화시켰던 데 비해, 현 충남도는 복지중심의 행정기능을 강화한 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도내 지역주민 복지와 관련된 기획력을 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이와 같이 민선 5기 충남도의 1년은 사람중심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행정의 주요한 사업기획과 방향설정 및 관련 과제 발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상보육과 급식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은 조기에 착수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지역 경제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주민 생활 개선 및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중요한 사업들이 진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람중심의 변화를 지향하는 행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4. 제언

민선 5기 충남도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1년 시점에서는 중요한 행정추진의 방향 전환의 단계가 가시화되었다고 정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구체적인 시책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선 5기의 핵심적인 방향인 ‘주민참여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충남도 의회에 보류된 상태로 제도 도입이 담보상태에 들어가 있고, 변화된 충남도정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조직 내부의 혁신 작업은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충남도정은 주민참여를 내실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충남도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운영을 위한 조례제정과 실행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 도입은 충남도 자체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지방의회의의 전격적인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의기반을 확충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민선 5기 충남도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내의 경제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지역내부로만 국한하는 차원의 정책적 노력보다는 가능한 권역경제의 큰 틀을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대응전략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충청권 광역경제권역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 마련은 물론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상생협력 및 발전 노력의 구체적인 지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경제권의 중요한 기반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제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세종시, 그리고 충남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내포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과제 역시 민선 5기 충남도정이 반드시 챙겨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도청 이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 건설의 내용과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과제를 도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역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당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의료,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인센티브의 발굴과 적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의 발판이 남은 민선5기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 연 정 ychung10@pcu.ac.kr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Tel. 042-520-5142

충남도 사회적경제 정책과 내발적 발전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센터장

[요약]

-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도입은 기업유치 등 외래형 지역개발의 한계 인식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제조업 중심의 양적성장과실이 역외로 유출되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로 연결되지 못하는데서 찾을 수 있음
- 사회적경제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의 이익을 강조하고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사회적 방식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을 지님. 또한, 사회적경제는 지역 내 연대의 창출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낙후된 경제 뿐 아니라 환경, 문화, 교육, 보건 등 지역의 자원과 지역주민의 역량에 기초한 집합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내발적 발전의 속성을 지님
- 사회적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차원에서 충남사회적경제 T/F 팀을 설치하고,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을 출범준비중임. 충남도의회에서 연구회, 충남발전연구원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가들의 협의체인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나뉘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사회적경제정책을 통한 내발적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면, 첫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무원 및 도민들의 올바른 이해의 확산을 위한 학습이 요구됨. 둘째, 충남도 및 시군은 기업유치 일변도의 외생적 발전에 탈피하여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발적 지역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셋째, 충남도 및 시군은 사회적경제를 총괄담당하기 위한 부서를 확대 개편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충남도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간의 연대가 강화되어야 함

1. 머리말

-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응한 제3의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생적 발전론에 바탕을 둔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가 그것이다.
-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경제로 분류할 수 있는 조직들의 활동은 과거부터 있어 왔으나, 사회적경제 개념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사회적경제 개념은 막연하게 사용된 셈이다.
- OECD는 사회적경제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한 재정적 실효성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참여자의 의사결정이 자본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의 영향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모두 배분하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명백히 추구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지금까지 충청남도의 시군들은 제조업 등 기업유치와 대규모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산업과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외생적 지역발전방안을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앞으로는 외부자본과 기업을 유치하여 시군을 활성화 하는 방향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시군 고유의 특성과 잠재력에 기반한 발전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 따라서, 아직은 꺾여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내발적 발전을 비교해 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충남의 내발적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도입 필요성

1) 외래형 지역개발의 한계인식

- 외래형 지역개발은 SOC에 집중 투자하여 산업기반을 정비하고, 공장을 유치하면 관련산업이 발전되어 지역경제가 발달하여 지역의 자산가격과 소득수준이 상승하고 재정수입이 증대되어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외래형 지역개발은 그 기대와는 달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외래형 개발은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였지만, 상당수의 지역은 기업유치에 실패하였다. 성공한 곳이라도 공해·재해가 발생하고 수출산업에 편중되며 관련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였는데 특히 농업쇠퇴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부의 대도시 집중과 대도시화에 따른 과밀과 지방의 과소화를 초래하였다.
- 2003년 정부에서 도입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초기에 발표된 연구보고서들에 의하면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2011년 2월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존립위기에 직면하거나 사업진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개발면적 축소, 지정해제 검토 등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¹⁾
-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유치와 첨단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 성과는 그다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듯하다.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기업유치에 대한 무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1) 최천운·유정석,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개발전략의 적합성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1, p.78.

- 지역 스스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지역침체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패배주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의 역동성이 저하되어 왔다. 결국 정부지원, 외국인 및 기업투자 등 외부자원의 동원이 집중되는 지역은 단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회성 지원 또는 투자성과의 외부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²⁾
- 따라서 지역의 외부자원을 동원하는 외생적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 내부의 동의와 합의로 접근하는 내생적 발전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성장과실의 역외유출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 미흡

- 충남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양적성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 충남 경제는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 아산, 당진지역이 충청남도 여타 시군에 비해 기업입지에 따른 노동기회, 수도권에 가까운 지리적 조건 등에서 비교우위의 위치에 있어 급격한 지역성장 양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나머지 권역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업 중심의 양적성장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이들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 그 결과 전국의 타 자치단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북부권의 성장과실이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해 충남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나머지 지역은 낙후지역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내 많은 시군들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를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도 나머지 지역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2) 박용규 외,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지역경제활성화,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9.9.21, pp.3-4.

- 충남도의 지역별 성장패턴을 고려해 볼 때 북부권의 성장모델이 나머지 지역에 유용하지 않을 뿐 더러, 북부권과 같은 성장 모델을 고집할 경우 외래에 대한 의존정도가 심화되어 지역경제는 오히려 피폐화될 가능성이 예상할 수 있다.

3. 사회적경제와 내발적 발전

1) 사회적경제의 범주

-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분류는 노대명(2007), 엄형식(2008), 신명호(2009)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 노대명(2007)은 공공지원형 일자리 사업,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성격 I	성격 II	유형분류	세부설명
국가 ▼ ▼ ○ ○ ○ ○ ○ ○	정부의존 ▲ ○ ▼ ▼ ▼ ▼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노인생산공동체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자립지향 ▼ ▼ ▼ ▼ ▼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노동부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자립형 공동체사업(=마을기업)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경제 ○ ○ ▲ ▲ 시장		민간지원기관	대안금융기관
	비영리 ▲ ○ ▼ 영리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단체(서비스공급형)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자료 : 노대명, 한국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2007.

- 엄형식(2008)은 전통적협동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새로운 사회적경제(민간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로 구분하고 있다.
- 신명호(2009)는 경제활동영역을 생산, 소비, 교환, 분배 영역으로 구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회적경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공동체, 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농협³⁾,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화폐, 공정무역, 아나바다운동단체,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시민단체 등

2) 내발적 발전

- 내발적 접근법은 일정지역이 특정한 자연적, 인적, 문화적 자원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 이 내발적 발전 접근은 각 지역마다 독특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제도적 접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OECD(1992) 및 Giacchino Garogoli ed(1992)는 내발적 발전의 성공조건으로서 지역자원의 활용, 산업 다변화, 토착기업가 육성, 지역 내 주체간의 파트너십, 사회경제적 변환능력(외부 도전에 대한 응전)과 혁신의 능력, 사회적 학습의 증진, 지역 내 협력을 촉진하고 외부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제도 및 기구의 발달을 들고 있다.⁴⁾
- 일본의 미야모토겐이치(宮本憲一)는 내발적 발전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즉, ①지역의 산업·문화를 토대로 지역 내 시장을 주 대상으로 지역의 주민이 학습하고 계획·경영할 것, ②환경을 고려하는 개발 아래 어

3)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가 등장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4) 박경,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내생적 발전론, 사회과학연구 제47집, 2008, p.104.

메니티·복지·문화의 향상을 중심 목적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인권 확립을 꾀하는 종합성을 가질 것, ③지역내 산업연관을 중시하여 지역산업의 다각화와 부가가치의 지역내 귀속을 도모할 것, ④주민참가 제도를 만들어 자치체가 자본이나 토지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보할 것 등이다.

3) 사회적경제와 내발적 발전의 관계

- 왈라스는 사회적경제를 자본주의 체제의 결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데 그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규범적이고 윤리적 영역으로 분배에 초점을 맞추며 정의의 논리를 포함해 다양한 논리를 다룬다.
- 또한,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이익을 강조하고,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지역이 시민조직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시장적 방식이 아닌 사회적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경제활동을 조직한 것이 사회적경제이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지역내 연대의 창출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경제는 모래성이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역내 연대가 활성화됨을 의미하고, 사회적경제로 인해 지구화 또는 자본주의가 갖는 문제점이 가져오는 위협으로부터 지역민의 보호망이 강화됨을 의미한다.⁵⁾
-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집합적 대응의 노력은 여러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비단 낙후된 지역경제의 재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필요만이 사회적경제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아니다. 환경, 문화, 교육, 보건 등의 집합소비영역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도 지역사회의 내발적 발전의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문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역주민들의 집합적 대응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5) 김정원,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제언, 한국사회적경제의 과제와 전망, 2009한국사회포럼 기획토론, iCOOP생협연합회 외, 2009, pp.5-6.

4. 충남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

1) 자치단체

(1) 충남사회적경제 T/F팀

- 충남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역형사회적기업(충남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충남사회적경제 TF팀이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경제 TF팀의 구체적 업무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총괄, 충남형 사회적기업 추진, 자립형공동체사업(마을기업) 추진,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사회적기업 민관협력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사회적일자리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지원 등이며,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
- 그러나 사회적경제 TF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관련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충남도 사회적경제영역인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여성가족부 여성일자리창출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 NGO,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 통합기능 및 각 부서 간 조율업무를 관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

-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은 사회적경제정책을 충남도정에 도입하여 내발적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공무원, 연구원, 도의회, 전문가, CB 및 CS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TF팀의 성격을 지닌다.
-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은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정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첫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확산을 학습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둘째, 사회적경제를 지방자치단체 지역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기 위한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셋째, 사회적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을 조정 및 집행하기 위한 거버넌스체재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넷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사업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 다섯째, 사회적경제 전략분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코자 한다.
- 여섯째,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 충청남도의회

-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충남도의회사회적경제연구회”를 구성 및 운영 중에 있다. 충남도의회사회적경제연구회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따른 행정, 재정적 지원과 정책개발을 연구하고, 충남의 사회적 경제활동가와 의회, 대학, 민간단체 등 지원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교류와 역량강화, 상품우선구매 등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연구회는 도의회의원, 연구원, 사회적기업대표,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연구회운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도의회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집행부의 중장기적 사회적경제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방안, 방향설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충남사회적경제지원

센터」는 충청남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전문지원기구 설립)와 충남도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10년 12월 22일 충청남도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되었다. 센터는 박사급 연구인력 2인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근 연구위원 1인, 상담인력 1인, 과제에 위촉된 연구원 1인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내 연구진들과 공동수행하고 있다.

- 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영역의 기반확충 및 저변확대를 위한 조사, 연구, 워크숍,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과 공생에 기초한 커뮤니티 조성(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기능), 충남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발굴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시책의 통합적 지원 및 조정(중간지원조직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 충남지역내 CB 및 SE가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도 지부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건강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상생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의 가치 실현과 성장을 도모하며 사회적기업간의 교류 및 협력강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010년 12월 준비모임을 통해 정관을 제정하고, 2011년 발기인대회, 협의회사업계획 논의, 법인설립에 대한 간담회,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지부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5.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한 내발적 발전 방안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확산

-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스스로 자신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생적발전전략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수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 개설, 충남도에서 운영중인 독서대학에 사회적경제영역의 도서(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협동조합, 지역화폐 등)를 필독서로 지정, 도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학습기회 제공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 구축

- 기업유치를 통한 외생적 발전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 방식이고, 사회적 목적에 봉사하는 경제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의 이익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지금까지 외래형 발전 전략으로는 여성들이나 취약계층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즉, 외래형 발전전략은 배제적 발전전략인 셈이다. 배제적 발전전략에서 포용적 발전전략으로의 지역발전전략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에 입각한 지역발전전략의 구축은 이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 지점이 될 수 있다.⁶⁾

6) 김정원 외, 지역적합형 사회적기업 모델수립 방안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지원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2007.11, pp.106.

3) 사회적 경제의 총괄기능 강화

- ‘사회적경제T/F팀’을 확대·개편하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시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거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시책은 ‘사회적경제 T/F팀’에서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시책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시책수행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 경제주체들 간의 연대 강화

- 충남도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간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도 및 시군자치단체-도의회-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 개별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협, 협동조합, 자활공동체)간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 물론, 도와 시군자치단체 간, 도와 시군의회 간,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도 협력 및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다.
-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서는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가 있지만, 이들간 협력 및 파트너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기업과 B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하지만, 세부생산품목이 다를 경우 양 기업이 협력을 하여 생산하거나, 소비처를 공유하게 되면, 다양한 품목의 생산으로 양 기업 모두의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 지금까지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동향을 내발적 발전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왜 충남도정에 사회적경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고, 충남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의 추진을 통한 내발적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충남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은 분명하다.
- 이미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로컬푸드, 의료생협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해 왔기에,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주도의 정책으로 발전할 것에 대비하여 충청남도는 민선 5기 1년이 지난 지금부터라도 사회적경제 관련정책을 총괄하는 기능 및 연구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를 실천해가지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국회예산정책처,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 사업평가 10-06, 2010.7..

김정원 외, 지역적합형 사회적기업 모델수립 방안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지원
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2007.11.

김정원, 지방정부의 지역중심 사회적기업 개발정책 제언, 지역재단 개원7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1.

박용규 외,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지역경제활성화,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9.9.21.

박진도,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제, 교유사, 2011.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봄호, 통권 제75호, 2009.

이은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자료(안), 2011.

임준홍·김양중·송두범, 충남형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충남리
포트, 제45호, 2010.

현대경제연구원, 커뮤니티비즈니스 : 지역경제활성화의 새모형, Global Management Insight,
2006.2.2.

송 두 범 dbsong@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외적경제지원센터장

Tel. 041-840-1200

충남농정의 새로운 변화와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유학열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조은정 초빙연구원

[요약]

- 지난 민선 4기와 비교해서 민선 5기 충남 도정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농업, 농촌 정책 즉, 농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충청남도는 지난 2월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위원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충남 농정의 비전과 혁신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도출하고 있음
- 도출된 실천과제들을 토대로 민선 5기 충남농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농촌지역리더의 발굴 및 육성,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구축, 도시(소비자)와 농촌(생산자)의 상생 부문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집중 투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농정의 변화에 맞춰 민선 5기 충남 농정의 비전을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사회 실현’으로, 농정의 목표를 ① 충남 농어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②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③ 순환과 공생의 충남 도농 공동체 만들기로 설정함
-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으로는 농정추진체계혁신, 농촌지역리더 양성, 지역사회연대 조직화, 대안적 사회시스템 구축, 21C형 고부가 농수산업으로 제시함

1. 서론

- 오늘날 충남의 농업·농촌은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 고령화 및 정주환경 취약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 한편,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농촌으로의 회귀현상 등 긍정적 의미에서의 농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음
- 이렇듯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는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에서는 민선 5기 충남 농정의 4대 핵심 부문을 ① 친환경농업 및 지역식품체계 구축, ② 지속가능한 내발적 농촌 발전, ③ 주요 6대 품목 발전(쌀, 축산, 과수, 원예, 임업, 어업), ④ 농정 거버넌스 발전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세부분야를 설정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오늘날의 충남 농촌·농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민선 5기 충남농정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해 논하고자 함

2. 충남 농촌·농촌의 현실

□ 농림수산업구조

-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5년 47조4,973억 원에서 2009년 65조7,59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충청남도 농림어업 생산은 2005년 3조3,968억 원에서 2009년 3조3,62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09년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 생산이 5.11%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국의 전체 지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2.40%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충남지역의 농가수 및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어가수 및 어가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충청남도의 농가수는 2005년 16만3,197가구에서 2009년 15만8,528가구로 연평균 2.86% 감소한 반면, 전국 대비 농가수 비중은 2005년 12.82%에서 2009년 13.27%로 증가함
- 경지규모 0.5ha 미만 영세농의 비중이 전체 농가의 33.9%로 전국 비중 39.8%보다 낮으나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경지규모 5ha 이상의 대규모 농가도 증가하고 있어 영농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농가경제

- FTA 등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농산물 가격 및 농업소득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원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급등락으로 농가경영 불안정 요소가 상존해 있는 실정임
- 충청남도의 소득원별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이 1,003만원, 농외소득이 1,410만원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외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16%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한편, 충청남도 농가 지출은 2,740만원으로 전국 평균 2,657만원보다 3%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농식품 · 농산업 동향

- 충남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는 1,374건으로 전국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가수는 4.0%, 면적기준으로는 5.3% 정도의 수준임. 친환경축산물의 인증건수는 102건으로 전국의 8.7%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가수는 7.2%, 출하량은 6.5%를 점유하고 있음
- 충남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실적은 전국의 8.1%를 점유하고 있는데, 농산물과 임산물의 경우 전국의 11.8%, 15.9%로 비교적 높은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2.4%와 1.4%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 지역별로 특성화된 향토산업을 매개로 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가 강조되면서 충남도에서도 향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대표적 향토산업으로는 금산 인삼, 서천 한산모시, 청양 구기자, 공주·부여의 밤 등을 꼽을 수 있음

□ 인구

- 충남의 고령 농가인구(65세 이상)는 2005년 134,670명에서 2020년 142,433명으로 7,763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 농가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0.2%이나, 젊은 농가인구의 유입 저조와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2020년 43.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충남의 경우, 2005년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 기준 과거 4년 동안의 귀농가구수가 연평균 71.3세대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4년 동안은 연평균 201.3세대로 약 3배가 늘어남

□ 기초생활환경·경관

- 충청남도의 도로 포장률(2009년 기준)은 시·군도 72.0%, 지방도 79.4%인데 반해 농어촌 도로 포장률은 48.4%에 불과함. 또한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2008년 기준)은 일반 상수도의 경우 시부 95.9%, 읍부 86.5%인데 반해 면부는 54.9%에 그치고, 광역 상수도의 경우 시부 95.7%, 읍부 82.8%인데 반해 면부는 36.0%로 도농간의 격차가 매우 심함
- 충청남도과 일부 시·군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창출을 위한 경관법(충청남도 2009.12/ 아산시 2009.3/ 당진군 2009.6)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서산시 2009.12/ 금산군 2007.4)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그러나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지역에 한정된 실정이므로 농어촌 지역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문화·여가

- 주민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여가분야의 만족도가 농촌지역 삶의 질 7개 분야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지역에 문화·여가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현재 충남도내 공립박물관 9개, 공연장 31개소 수준임)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임

□ 지역발전역량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 상향식으로 변화되면서 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있어 마을리더·주민, 지자체 등 지역 주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이 형식적인 주민참여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주민주도형 농어촌지역 개발 및 마을 운영에 필요한 역량이 미흡한 실정임

3. 충남농정의 새로운 변화 및 비전

3.1 충남농정의 새로운 변화

□ 지역순환형 농식품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충남도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을 위한 지역순환형 농식품체계(로컬푸드시스템) 구축
- 농업생산성의 향상,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도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지속가능한 내발적 농촌 발전

- 지역 내에 잠재된 물적·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며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발전 전략 수립
- 농촌지역역량 강화를 지역리더의 발굴 및 육성

□ 21세기형 고부가가치 농수산업 육성

- IT·BT를 활용한 미래 농업 육성
- 가치 중심의 고품질 농식품 산업 육성

□ 민간 중심의 농정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정책결정과정에 농어민(농어업단체)들의 직접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농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일관성 있는 농정 추진
- 정책수혜자인 농어민이 정책수립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2 충남농정의 새로운 비전

□ 민선5기 충남농정의 비전

-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사회 실현

□ 민선5기 충남농정의 목표

- 충남 농어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 순환과 공생의 충남 도농(都農) 공동체 만들기

□ 민선5기 충남농정의 핵심전략

- 농정추진체계 혁신
- 농촌지역리더 양성
- 지역사회연대 조직화
- 대안적 사회시스템 구축
- 21세기형 고부가 농수산업

4. 충남농정의 새로운 과제)

□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이 부문의 핵심전략과제는 크게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녹색 식생활교육 확산,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나눌 수 있음
-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선 충남 농식품체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기획하고 있으며, 관련 심포지엄 개최, 농민장터 운영 등을 세부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음
- 도민의 올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한 녹색 식생활교육 확산이라는 과제에서는 음식시민 인문학교육, 학교텃밭 조성,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 학교급식센터는 충남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2014년까지 4개의 센터(당진군 설치 완료)를 설치할 계획임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실천과제로서는 친환경 농업 생산 인프라 확충, 친환경 농업 6차 산업화, 친환경 리더 및 R&D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 친환경 농업 생산 인프라 확충: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농업환

7) 제시된 사업개요, 사업비 등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님을 밝힘

경 부하경감,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지원 및 시설 개선

- 친환경 농업 6차 산업화: 도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 상생 기반 조성,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운동,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소비활성화

□ 지속가능한 내발적 농어촌 발전

- 이 부문의 핵심전략과제는 충남도 지역리더 양성계획 수립, 귀농·귀촌 지원센터 조성, 충남형 마을 만들기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농촌 테마마을 조성,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정·운영,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들 수 있음
- 충남지역 지역리더 양성 계획 속에는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대학, 귀농대학 등 기존사업과 더불어 새롭게 지역리더 육성, 농어촌체험마을 순회교육이 신규사업으로 구상됨
-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2014년까지 4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귀농지원은 물론 도농교류 역할도 포함시킬 계획임
- 충남형 마을 만들기 모델개발 사업은 현재 기반구축 시범사업 단계별 추진방안 구상 및 실행계획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 농촌 테마마을 육성 사업은 마을당 2억 원을 지원하여 생태, 문화 등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임. 2014년까지 80개소를 선정 지원할 예정임
-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 설정·운영은 우선 시군별 특성에 맞는 농어촌 공공서비스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3년에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21세기형 고부가 농수산업 육성

- 이 부문의 핵심전략과제는 과수산업 유통 구조개선, 시설원에 경쟁력 강화, 안전한 인삼 생산, 가축분뇨자원화 및 농촌환경 개선, 축산물 유통

통구조 개선 및 부분육 유통시스템 구축, 임업과 농업의 융·복합 추진에 의한 임산업 육성,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과 귀농 지원, 지역명품 수산물 특화자원, 지식·정보화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수산업 육성 등에 관한 과제들이 도출되고 있음

- 과수산업 유통 구조 개선은 2014년까지 과실전문 APC를 4개소 건립(추진중1, 신규2, 통폐합1)한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시설원에 경쟁력 강화 사업은 재해위험시설 보강,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하우스 환경개선과 측면 자동개폐기, 보온터널 자동개폐시설 등 재배환경 생력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안전한 인산 생산을 위해서 연작장해 해소 및 토양환경 개선, 채굴 수삼 전량 검사, 품질 인증 시스템 구축 등을 세부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음
- 가축분뇨자원화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기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깨끗한 농장 만들기, 조사료 생산 전문 경영체 육성 등을 보완해 나가면서 신규사업으로 양계농 계분 고속건조기를 설치할 계획임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부분육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4년까지 농·축협 유통판매시설(16개소) 및 부분육 가공시설(7개소)을 지원할 계획임
- 임업과 농업의 융·복합 추진에 의한 임산업 육성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농산물과 친환경임산물의 생산과 유통·판매 구조의 연계, 농·임산물 공동 수출 등 해외시장 판로 및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구상임
-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과 귀농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500개소를 추진하며 친환경 임산물 및 웰빙 수요에 맞는 유망 산채작물을 보급하고 귀농·귀촌 교육과정에 임업분야를 포함토록 할 계획임
- 지역명품 수산물 특화 지원사업 속에는 보령 명품바지락 육성, 서산 참굴 양식, 서천 김 클러스터구축, 태안 해삼특화단지 조성이 포함되어 추진될 계획임
- 급변하는 수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조성으로 지식·정보화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수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 계획 속에는 수산연구소 연구시설 현대화 및 해양수산분야 R&D 역량 강화 부분이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 민간중심의 농정거버넌스 구축

- 향후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한 과제 발굴이 필요함. 현재까지 제시된 계획으로는 충남 농수산혁신위원회 조직 구성·운영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방향 정립, 농어가 소득안정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된 사업·정책에 대해 검토, 협의, 자문 기능을 수행함

◆ 참 고 자 료 ◆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속 워크숍 자료(제1회~제6회)
유학열, 2011. 6, 민선5기 충남 농정의 방향과 실천과제 연구 중간연심회,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농정의 방향과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 자료집
유학열, 2011. 6, 민선5기 충남 농정의 방향과 실천과제 연구 중간연심회,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2011,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충남발전연구원, 2009, 충남 농어업·농어촌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충청남도, 2010,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충청남도, 2010,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충청남도, 2010, 통계연보
충남발전연구원, 2009,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 학 열 hyyou@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장/책임연구원

Tel. 041-840-1201

조 은 정 choej@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소빙연구원

Tel. 041-840-1208

※ 본고는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혁신위원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민선 5기 충남 농정의 혁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본고에서 제시된 비전과 목표, 실천과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을 밝힘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을 만들자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오용준 연구위원

[요약]

- 충청남도는 현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만들기 시책은 농촌형 마을 만들기(가칭 '희망마을 만들기')와 도시형 마을 만들기(가칭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로 구분됨
- 충청남도가 지역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마을 만들기가 지역역량에 기초한 전형적인 내생적 지역개발사업이고, 장소(place)보다는 사람(people)의 번영에 초점을 둔 지역발전전략이며, 지역만들기의 추진동력이 주민으로부터 발현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란 '주민이 존중받고 주민들의 삶의 가치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으로 구현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의 정책과제(운동으로서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서의 마을 만들기, 계획수법으로서의 마을 만들기)를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 추진전략(마을 만들기 지원제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을 마련해야 함
- 특히, 마을 만들기에 있어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실현과정으로써 민선5기의 정책목표(분권과 참여민주주의)를 지역에 뿌리내리는 이념적 기제로 작용하여 행복한 충남공동체를 실현하는 역할을 할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주민참여형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정책으로의 전환

- 삶의 가치관이 물질주의적 가치(materialistic value)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post-materialistic value)로 변하고 있어 생활의 양적인 조건 못지않게 질적인 조건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
- 여기에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식이 신장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지역만들기가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음

◆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환경의 필요성 증대

- 도시화 과정으로 대면적인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이 약해지면서 공동체적인 지역사회의 해체를 초래하게 되었음
- 도시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정책은 불가피한데, 이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로 실현되는 지역공동체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공간단위이기 때문임

◆ 민선5기 주요정책의 실현수단으로 기능

- 2010년 10월 충남도민 정상회의에서 300인의 1일 도지사들이 선정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가 ‘주민 중심의 도시와 마을 조성’이었음
- 이에 충청남도는 민선5기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의 기본전략 중 하나로 채택하였음

2) 연구목적

- 도시 및 마을 만들기의 이론을 고찰하고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국내 정책과 사례(대상지역별, 프로그램별)를 평가해 연구과제를 도출한 후,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 개념을 정립함
-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를 위해 충청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전략을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으로 나누어 검토함

2. 관련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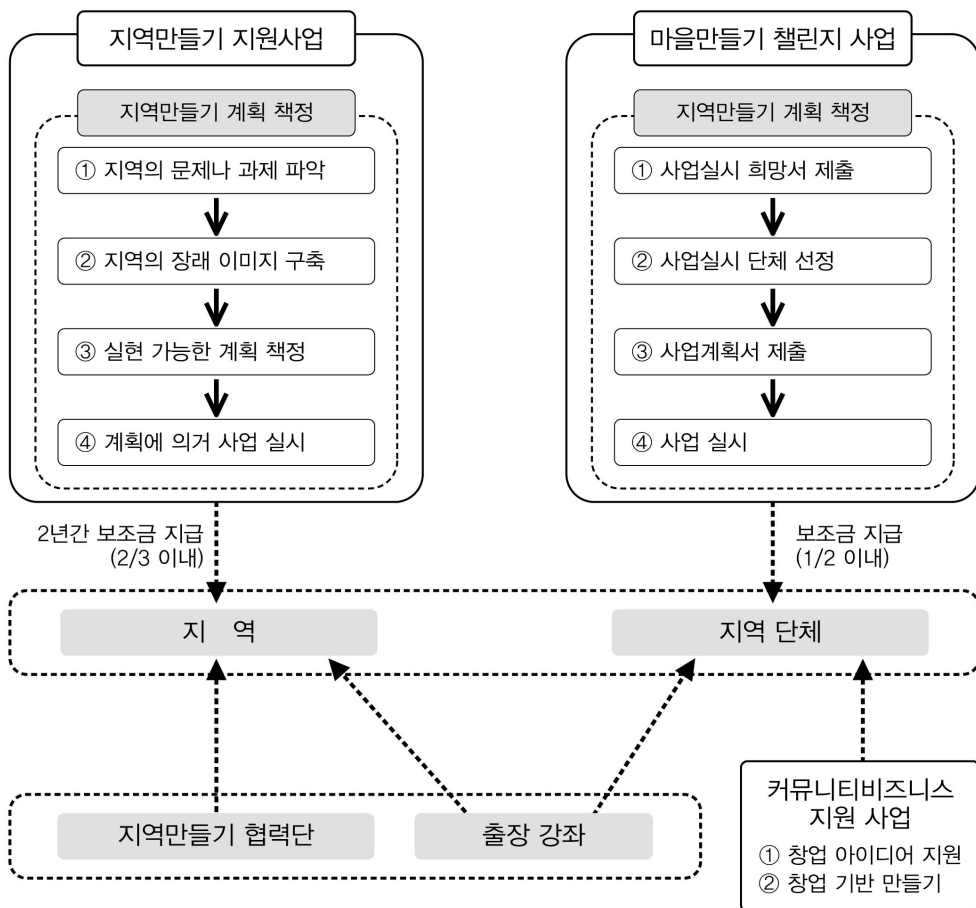
1) 도시 및 마을 만들기 관련정책

- 도시 및 마을 만들기를 위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모든 부처에서 사업을 시행 중임
 - [시·군단위] 국토해양부(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소도읍육성사업 등), 농림수산식품부(구.신활력사업), 환경부(그린시티, 에코시티) 등
 - [마을단위] 국토해양부(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사업), 행정안전부(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 중앙부처 지원사업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의 인식을 변화시켰고, 마을만들기 운동을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반면, 관련예산 지원이 중단된 사업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남

2) 외국의 도시 및 마을 만들기 사례

◆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그림 1> 사이카미마치에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구성



- 일본의 내발적인 발전전략과 연계되어 많이 소개된 야마가타현 사이카미마치는 2003년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커뮤니티 조직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만들기 지원 사업⁸⁾', 지역 내의

활동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마을 만들기 챌린지(Challenge) 사업’⁹⁾,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사업’ 등의 3개 사업으로 구분됨

- 지역만들기 지원 사업(사업비 2/3 이내 보조)과 마을 만들기 챌린지 사업(1/2 이내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실적이 우수한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전년도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규모를 차등 편성)

◆ 미국 시애틀의 근린계획제도(Neighborhood Planning Program)

- 주민참여의 대표사례로 알려진 인구 60만 규모의 시애틀은 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근린공동체(Neighborhoods)가 100개를 넘는데, 이 중에서 37개의 근린공동체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물리적, 사회적 커뮤니티 건설을 위해 시 전체 예산의 0.5%에 해당하는 근린지역 지원기금(Neighborhood Matching Fund)¹⁰⁾을 조성하여 시민주도의 프로젝트에 지원
- 매년 6천명 이상의 정원사가 70여 곳의 부지에 소규모 시민정원(Community Garden)을 조성하여 10톤 이상의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지역의 푸드 뱅크(Food Bank)에 공급

8)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2/3(50만 엔 이내)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엔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며, 사업비의 1/3은 자기부담으로 구성됨.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정내의 40개 마을 가운데 8개 마을이 사업지원을 받아 주차장 등 주변 환경 정비, 서적 발간사업 등을 실시함.

9) 마을만들기 챌린지(Challenge) 사업은 프론티어나 동아리와 같은 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사업실시희망서를 제출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1/2(20만 엔 이내)을 보조함.

10) 근린지역 지원기금은 주민활동지원기금(Small Sparks) 최고 \$1,000(1,076,000원), 소규모 프로젝트 기금(Small and Simple Projects) \$20,000(21,520,000원), 대규모 프로젝트기금(Large Projects) \$100,000(107,600,000원)을 지원 → 초기 17년 동안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함.

3)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 사례

◆ 서울시의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운동(‘운동’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사례)

-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는 운동의 지속성과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에 기여하였고, 현재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보행기본법』 제정도 준비 중임

◆ 서울시, 수원시의 놀이터 리모델링(‘사업’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사례)

- 수원시의 영통 놀이터와 서울시 노원구의 놀이터 리모델링은 사업이 갖는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어 서울시의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정책화됨. 이 사업은 주민참여가 필수적인데, 초등학교 4~5학년생의 의견청취가 사업의 전제조건임

◆ 서울시 노유거리 만들기(‘계획수법’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사례)

- 서울시 노유거리는 기성시가지 상업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설계 시범사업으로 정비되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가 사업에 참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대학 4차례 개최, 주민협의체 구성 20여건, 2회의 전수설문조사 등)가 적극적이었기에 바닥을 친 상권이 활성화되어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됨

4) 충남 도시지역의 마을 만들기 관련사업

- 충남 도시지역의 마을 만들기 관련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활

성화 사업 등이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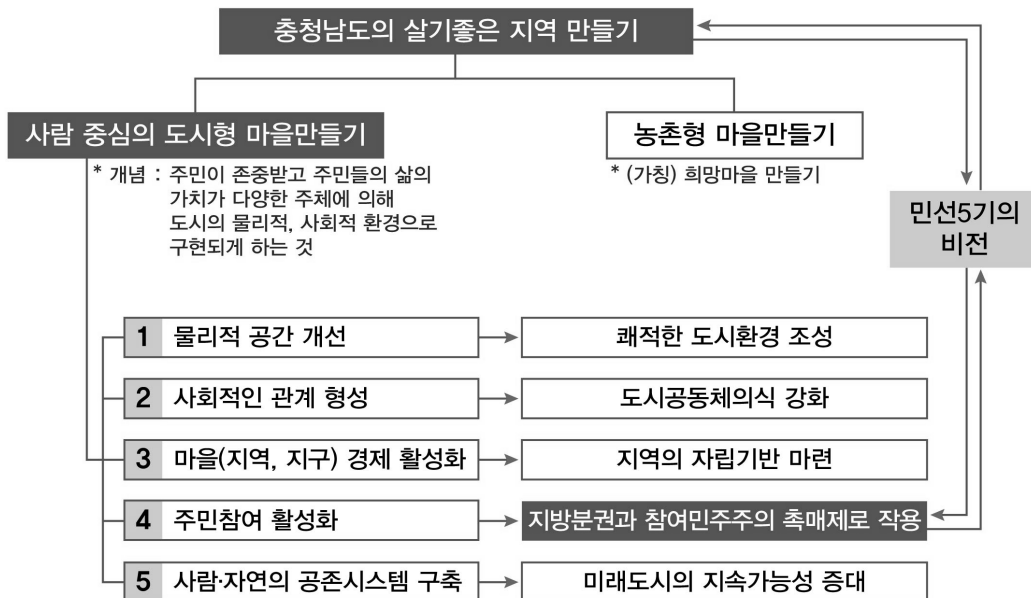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금산, 서천, 논산 3개 도시에 총 56억 지원)은 계획단계에서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졌으나,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다소 미흡
- 소도읍 육성사업(충남 15개 소도읍 선정)은 공모사업의 성격상 우선 선정이 목표로써 주민참여, 추진체계 등이 다소 형식적
- 주거환경개선사업(48개 사업지구 지정, 이중에서 20개 지구 준공, 2011년 현재 28개 지구 진행 중)은 지역의 물적환경이나 주민의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무관하게 사업시행자 의지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사업지구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
-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충남 75개소 추진 중)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사업에 대한 현실성 반영이나 공감대 획득구조가 미약

3.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만들기의 개념 · 추진전략

1)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의 개념

- 사람중심의 도시형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존중받고 주민들의 삶의 가치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으로 구현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함
- 보다 구체적으로 ‘① 물리적 공간 개선, ② 사회적인 관계 형성(도시공동체 의식 강화), ③ 마을(지역, 지구)경제 활성화, ④ 주민참여 활성화, ⑤ 사람과 자연의 공존시스템 구축’이라고 정의

<그림 2>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의 개념



-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 정책은 ‘동네’라는 자치단위를 통해 도민의 자율권과 자치권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충남도 민선5기의 비전인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민참여를 중요시 하는 이유는 주민 스스로 결정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결정권한이 행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도 함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권한의 분산’을 의미

2)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의 추진전략

- 마을 만들기를 위한 조례를 제정
 - 마을 만들기가 주민주도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충남도는 큰 틀에서 예산 지원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만 갖추고, 구체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조례 등의 근거규정을 만들어 지속성을 확보
-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원조직을 구성
 -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지원으로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을 우선 검토
- 마을 만들기를 주도할 주민조직을 육성
 - 마을 만들기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의 자생적인 조직을 육성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마을대학 등)을 마련해 추진
- 마을 만들기를 위한 선도적인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추진
 - 마을 만들기 활동이 일회성의 물리적 환경개선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계적 지원¹¹⁾이 필요하고, 사업 전 과정에 대한 평가모니터링도 구축

11) 1단계(Start Up): 아이디어 발굴 및 마을계획 수립 사업 → 2단계(Step Up): 주민 주도의 소규모 시범사업 → 3단계(Jump Up): 주민주도 중규모 사업

-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립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마을(현행 정부 공모형 사업에서 배제된 지역)과 자립 구축단계 및 발전마을(기존 정부 공모사업 실시지역)을 차등화하여 추진

<그림 3>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의 추진전략



4. 결론 및 제언

- 미국과 영국에서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운동과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운동이 벌어지고 있음. 이 운동은 기계론적 가치관을 좇다 망가진 기존 도시를 인간적이고 활기찬 지역공동체로 재창조하는 데 목적을 둠
- 일본에서도 일찍부터 지역공동체 환경개선운동이 있었음. 이른바 마을 만들기(마치츠쿠리) 운동이 그것임. 이 운동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 지금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이 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도시·농촌마을은 과거의 어지럽던 모습을 크게 바꾸었음
- 왜 이렇게 잘사는 나라들이 구태여 지역공동체 개조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 기존 도시가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까닭임. 지난 시대의 기능주의, 대량생산주의, 기술만능주의가 빚어낸 도시공간은 환경파괴, 인간소외, 전통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음. 이것을 극복해서 도시를 다시 살기좋은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님. 1970년대 초에 이미 새마을운동이 있었으나 이 운동은 정부가 주도한 가난탈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환경개선에는 한계가 있었음. 1990년대 말부터 일부 시민사회단체, 주민협의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자발적으로, 그러나 간헐적으로 시행되었음.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참여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이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음

- 성장과 진보는 도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때 그 의미가 있음.
충남의 경제성장률이 전국에서 1위이지만 우리 일상의 삶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분명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는 반증임. 그동안의 성장과정을 되짚어보고 바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마을은 주민의 삶이 어우러지는 장소임. 때문에 이 장소를 살맛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성장과 진보의 바른 방향과 합치됨. 그동안 정부에 의해 개별적·간헐적으로 추진돼오던 마을 만들기를 이제는 충청남도가 주도하여 범도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할 때가 되었음

◆ 참 고 자 료 ◆

충남발전연구원, 2011,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 연구(안)

山田晴義 編, 2006, コミュニティの自立と經營, ぎょうせい, 東京.

Jim Diers, 2006, "Seattle's Department of Neighborhoods : Empowering Communities",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국제세미나

오 용 준 yjuno@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Tel. 041-840-1144

민선5기 1년의 충남 사회복지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성태규 연구실장

[요약]

-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생산성둔화 및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고령자복지서비스 증가 및 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등
 - 1세대 가구의 증가,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노부모, 장애인에 대한 부양기능 약화
 - 노인, 영유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수요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민족·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문제도 증가하고 있음
- 교육여건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특히 농어촌에서는 폐교가 증가하고 있음, 그리고 사교육시장이 확대되어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고, '고용없는 저성장'시대에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
- 충남은 민선5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종합적 대응, 고령자의 안정된 삶을 위한 종합적 대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유형별 복지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체계 기반 구축, 학습지원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체제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논의의 배경

- 민선5기에 들어 충남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행복교육’과 ‘맞춤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이 국정의 핵심과제였을 때의 충남도정의 주된 방향은 개발과 건설이었으나, 도민의 절대 생활수준이 향상된 현재 민선5기에서는 인간중심의 도정이 새로운 기본방향으로 설정됨
 - 이에 따라 민선5기 충남은 ‘평생을 책임지는 행복교육 실현’과 ‘맞춤복지 실현’을 7대 전략과제로 추진중임
- 이제 출범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그 성과와 문제점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본 글에서는 ‘행복교육’과 ‘맞춤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2. 여건변화

1) 복지여건¹²⁾

-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이후 10년 만인 지난 2010년에는 고령화율이 11%를 기록함
 - 지난 2000년 7.2%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0년에는 15.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통계청)
 - 저출산·고령화는 ①생산성둔화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②연금·사회보장·의료비지출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 ③노인

12) 충청남도(2010), 『민선5기 충남비전』을 참고하였음.

의 생활안정 및 의료복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장기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쓰나미와 같은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충남도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 정책분야 1순위로 노인복지정책을 꼽음¹³⁾

○ 복지욕구의 다양화

- 1세대 가구와 1인가구의 증가와 2·3세대가구의 감소
- 전통적인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의 자녀양육기능과 노부모, 장애인에 대한 부양기능도 약화됨
- 노인, 영유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수요 증가
 - 충남 지역사회복지계획(2010)에 의하면, 영유아복지정책은 충남의 역점 사회복지 정책분야 가운데 2위로 조사됨
 - 등록장애인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참여 욕구 또한 증가함
충남도의 등록장애인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다민족·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통합이 지역적인 복지 대상으로 대두됨
 - 2010년 현재 충남의 결혼이민자는 0.43%인 8,781명으로 전국의 0.36%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09년 기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은 10.9%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복지수요 증대

- 세계화의 영향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됨

13) 충청남도(2010),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식기반산업의 확대로 전문지식을 소유한 숙련근로자와 비숙련근로자와의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확대됨
- 이에 더해 FTA확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1차 산업을 주로 하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수요가 증대함

2) 교육여건

- 교육이 지역발전과 개인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
 - 지식기반시대로 전환되면서 교육은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개인소득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됨. 교육은 지역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학교 학생이 감소하고 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아직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불과 몇 년 이내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 공동화와 농촌발전의 재생산구조가 파괴되고 있음
 - 이에 지역차원에서는 학생인구 감소와 연계한 교육기간 확충이 요구되며, 시 단위 지역과 군 단위 지역의 차이를 감안한 교육정책이 요구됨
- 사교육시장의 확대
 - 2010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국가 중 1위로 나타남
 -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사교육시장의 확대로 이어져 국내 사교육 시장 규모는 40조 이상으로 추정되며¹⁴⁾, 사교육시장의 증대로 교육양극화가 초래됨

14) 현대경제연구원(2010), 사교육시장의 현황과 대책

- 과거에는 농어촌지역 출신도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의 기회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사교육여건 등 교육환경이 우수한 도시지역 출신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함

○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빠른 기술진보,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됨,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에 대한 여가활동 촉진, 시혜차원에서의 노인복지에서 고령자에 대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평생학습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청 중심의 평생학습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변경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다른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평생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요구 확대와 연계한 제도, 예산, 조직 등 지속적인 기반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교육의 필요성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침체된 이후 일자리창출은 국가 및 지역의 큰 화두가 되고 있으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고용창출 없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임
- 현재 거의 모든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고학력의 인플레이션시대이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기능을 대학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인력의 mismatch를 해소하는 노력이 요구됨

3. 민선 5기 1년의 현황

- 민선5기 충남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경제 양극화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으로 의료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있음
-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추진, 다문화가정의 사회안정과 보육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 통합상담콜센터 설치,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운영,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추진·계획하고 있음.
- 교육분야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역특성에 맞는 공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학부모·교사·지역사회·주민의 공동체적 노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교육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반영하면서, 산업화·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충남교육혁신위원회 구성, 혁신형 행복학교 육성·지원, 충남 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칭)충남 희망교육재단 설립,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등을 추진·계획하고 있음

4. 민선5기 충남복지 추진방향

1) 사회복지

- 사회복지의 복지수요자 가운데 자립대상자를 선별하여,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야 함

① 저출산에 대한 종합적 대응

- 저출산이 일반화되어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

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됨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영유아 건강보호 확대, 보건소를 중심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확대, 영아·장애아에 대한 전담보육시설 확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급,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수당지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복지 강화도 요구됨.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보호 확대, 내년부터 실시될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고령자의 안정된 삶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 고령화시대 독거노인을 포함한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필요
 - 무료경로식당, 월동비 지원 등의 강화 및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연대책임체계 확대 필요, 또한 노인을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동을 통한 적극적 복지책의 강구도 요구됨
 - 고령자들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시스템 정비, 노인창업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산업의 육성도 요구됨

③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권익 및 건강 증진, 복지전달체계 증진 등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함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④ 복지유형별 복지시설 확충

- 고령화를 맞아 노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특히 노인 그룹홈과 주간보호시설의 확충이 고려되어야 함
 - 농어촌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을 기능별로 특성화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기호·취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은퇴자를 위한 농장촌, 휴양촌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 장애유형별로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시설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2) 행복교육

-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수요 완화, 교육양극화 축소,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확립, 인적자원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함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교육에 관심있는 주체(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공무원)들이 함께 공교육을 지원하고 협력과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함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산업을 고려한 산학협력과 직업교육을 실시
 -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주민과 밀착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① 평생교육체계 기반 구축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이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학습, 고용, 복지, 문화를 연계한 공적 평생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고령화에 따라 장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의 여가생활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학습지원 인프라 구축

-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습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5일 등교제가 정착되면 지역사회가 담당하는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므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함

③ 산학협력 체제 강화

- 산학협력 체제 확대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수도권 진학, 지역출신 대졸자들의 낮은 취업률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기업과 교육기관 간 mismatch를 해소하여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에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지역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함

◆ 참 고 자 료 ◆

충청남도(2010), 『민선 5기 충남비전』

충남발전연구원(2010), 『2010년 충청도정의 현황과 발전과제(1),(2)』

충청남도(2008),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충청남도(2010),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현대경제연구원(2010), 『사교육시장의 현황과 대책』

성태규 tgsung@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

Tel. 041-840-1103

충남리포트 발간리스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 · 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 · 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 · 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 · 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 · 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 · 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 · 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 · 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 · 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 · 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 · 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 · 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 · 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 · 김양중	2009.12.31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 · 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 · 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 · 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 · 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 · 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 · 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 · 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 · 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 · 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사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 · 이선호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김영일	2011.06.23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